

5일 Market Index			
↓ 코스피	5163.57	↓ 코스닥	1108.41
	(-207.53)		(-41.02)
↓ 금리 (국고채 5년)	3.204	↑ 환율 (원·달러)	1465.10
	(-0.008)		(+14.90)



인공지능(AI) 도입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형화된 업무를 맡아온 청년 신입 인력에 대한 채용 수요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GEMINIO로 생성한 이미지

AI 고도화에 신입채용 위축 전문직·블루칼라 예외 없어

인력 수요구조 재편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과 고도화로 청년 신입채용 시장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면서 기존 인력에 대한 수요 구조도 재편되는 모습이다.

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AI 도입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형화된 업무를 맡아온 청년 신입 인력에 대한 채용 수요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AI발 고용 충격에 대한 우려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지난 달 열린 다보스포럼에서는 AI로 인한 하고 가능성이 핵심 이슈로 논의됐다.

**IMF “AI 확산으로 인한 해고에 대부분의 국가·기업 대비 못해”
3년간 청년층 일자리 21.1만개 ↓
이 중 98.6% AI고노출 업종 발생**

국제통화기금(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이 AI로 인한 해고에 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사회공공연구원 박재범 연구위원은 “AI 기술을 둘러싼 국가·기업 간 기술 경쟁이 이미 진행 중인 만큼, AI 확산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문제는 도입 여부가 아니라, 기업이 노동자들과 AI 전환 과정에 대해 얼마나 투명하게 협의하느냐”라고 말했다.

변화는 국내 고용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최근 3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21만1000개 감소했는데, 이 중 98.6%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했다. 채용 플랫폼 캐치에 따르면 지난해 신입 채용 공고는 전년 대비 34% 줄었다. 업무 전반에 AI 활용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이 정규직 신입 채용에 보다 신중해졌다는 분석이다.

산업 현장에서도 AI 도입에 따른 인력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KB국민

은행은 2023년 12월 AI 상담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콜센터 상담사 24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노조 반발로 해고는 철회됐지만, 이후 퇴사를 통한 자연감원이 이어졌다. 이는 기업이 직접적인 대량해고 없이도 인력 운영 방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직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 1200명 가운데 수습기관에 등록한 인원은 338명에 그쳤다. 공인회계사는 1년 이상의 실무 수습을 거쳐야 업무 수행이 가능한데, 4명 중 3명이 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세미나’에서는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현장 발언도 나왔다. 다만 “전문가는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신입 양성 단절이 장기적인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AI의 영향은 사무직을 넘어 제조 현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피지컬 AI가 고도화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블루칼라 직종도 예외가 아니다. 현대자동차 생산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투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콜센터 ARS를 중심으로 초보적인 AI 적용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다”며 “최근에는 AI 활용이 본격 확산되면서 회계사 등 전문직에서도 수습 중단 사태가 나타나는 등 대체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로 인해 일자리와 노동이 소멸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회적 전환에 노사정 모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기준으로 AI와 사람을 비교하는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양도소득세 이어 보유세도 때린다

구윤철 부총리, 다주택 완화 방안
7월 세계개편안에 ‘보유세’ 담을 듯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는 낮게해 불필요한 집 갖고있지 않게 해야”

다주택자 대상의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에 이어, 보유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주택 보유세가 낮은 대신 양도세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상황이 거래 활성화를 원천적으로 억제해 왔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올해 7월 중 발표될 세계개편안에 보유세 개편안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나온다.

시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과거 발언에 주목하는 분위기

다. 구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언론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막인 효과’(매물잠김이 고착화된 상황)가 굉장히 크다”라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보유세 및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결과는 올 연말께 나올 전망이다이지만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하고 관련 논의도 지속돼 온 만큼, 정부가 오는 7월 세계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 등의 거래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경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가 없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보유세는 높게, 거래세는 낮게 해서 불필요한 집을

갖고 있지 않게 하면서도 쉽게 팔고 나가게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재경부도) 큰 틀에서는 이 방향으로의 개편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기 대책으로 보유세를 쓸 생각은 안 하고 있다”며 “보유세는 세법 개정 같은 큰 틀을 통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논의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개편이 필요한 부분 중 올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관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다. 청와대는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번에 실시하는 양도세 중과 유예종료 조치를 보유세와는 연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3면에 계속〉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학장학생·올림피아드 대표단 친수 및 간담회(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단에게 우리나라 도약을 이끌 미래 과학자로서 다짐을 담은 기념액자 전달을 받고 있다. /뉴시스

李 “과학기술 인재 대체복무 확대 검토”

대통령과학장학생 등 청와대 초청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통령과학장학생과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를 청와대로 초청해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투자하고 과학 기술인들이 인정받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다”고 격려했다. 또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대체복무의 확대와 군대 체제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행사는 ‘도전하는 과학자,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장학

생으로 선정된 대학생·대학원생 205명과 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한 중·고교생 35명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신규 대통령과학장학생 대표 4인에게 장학 증서와 메달을 수여하고,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대표 4인에게는 기념패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면서 “앞으로는 국가장학제도 뿐 아니라 국가 연구자 제도까지 도입해서 평생을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며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또 남성 과학기술 인재의 국방 의무와 관련해 “군대 체제를 대대적

으로 바꿔볼 생각”이라며 “첨단 무기체계와 장비, 첨단기술을 익히는 기회로 만들어 군 복무 자체를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병역 숫자와 보병 중심의 군대였다면, 현실적으로는 정비와 무기체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병력 역시 전문가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체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 청년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 이행으로 상당 기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여러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다”며 대체복무 확대 및 군 체제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m



▲‘위안부피해자법’ 상임위 통과 …허위사실 유포 땀 형사처벌
▲정청래 “함당 선언한 적 없다 …초선부터 3선까지 의견 경청할 것”
/사진 뉴시스

▲조국 “민주당, 내부 논쟁서 합당 음모론 …우당에 대한 예의 없다”
▲‘줄속 함당 중단’ 與 서명운동, 이들 만에 2만 8000명 참여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공모 …최대 3년간 지원
▲여야, 정부위서 ‘김병주 김형석 위증’ 고발 두고 충돌